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복지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2. 11. 04.(금)
- 회부일자: 2022. 11. 04.(금)
- 검토기간: 2022. 11. 07.(월) ~ 11. 11.(금)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 나.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명시함(안 제5조)
- 다.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을 인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구청장이 협의체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마.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함(안 제10조)
- 아.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 제18조는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법 제17조제1항은 구청장이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활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의 홍보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구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특히 안 제7조(협의체 기능)제3호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자활센터가 그 운영을 위해 해당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달리 구청장이 관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규정목적이 서로 다름.
- 2022년 9월 현재 달서구에는 2000년 8월 24일 지정된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와 2010년 12월 27일 지정된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는 6개 자활기업(18명)과 24개 자활근로사업단(218명)을,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는 2개 자활기업(12명)과 16개 자활근로사업단(16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 10월 현재 달서구 직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동 및 구청에 68명(근로유지형 46명, 복지도우미 22명)이고, 복지시설 14개소에 18명(근로유지형

6명, 사회복지시설도우미 12명)으로 약 50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함.

- 대구광역시 또한 2012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